

얼어붙은 국회...출구없는 추경

與 단독 상정 野 불참에 심사 불발...4당 회동 이견만 확인

총리·부총리 설득나서...7월 국회 불발시 장기 표류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일자리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당이 10일 단독 상정했지만 야 3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심사는 불발됐다. 극심한 여야 대치 속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8일까지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장기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 달 7일 국회에 넘어왔지만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17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조금융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소하(정의당)·서영교(무소속) 의원은 참석했지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과 추미에 민주당 대표 발인 등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추경안 상정에는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되지만 심사에 적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탓에 회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가장 많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한 다. 이날엔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도

자리했지만, 현안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백재현 위원장은 “추경안 상정을 했지만 기다려달라는 야당 측 의견도 있다”며 “여야 4당 간사 간 협의 이후 예결위 회의가 정상화되면 일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윤소하 의원의 이견이 있었지만 백 위원장은 윤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와 앞서 이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가장 절박한 문제는 실업과 빈곤”이라며 “취직을 못 해 절망에 빠진 청년과 빈곤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도와주길 위원들께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3년 연속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일반 공무원 증원은 한 명도 없고 경찰 생활안전 등 서비스 공급이 미흡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이) 증원된다”고 설

명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예결위에서 추경안 처리는 최소 5일에서 7일이 걸리는데 이번 주를 놓치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선 예결위에서 일정을 진행해 정부에 제출할 위원회 수정안을 이번 주에 마련하고 의결은 (정치적 쟁점이 해결된) 이후에 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정례회동에서 과행 중인 국회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현안에 야당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한 반면, 야당 원내대표들은 인사청문 정국에서 정부와 여당이 결사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당 다음달 27일 전대 확정

국민의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다음달 27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의당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임시전당대회 소집과 이를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전대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치를 예정이다. 임시 전대로 선출되는 신임 당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지원 전 대표의 잔여임기인 2019년 1월까지 지도부를 이끌게 된다.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 조직 강화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임시전대 소집을 의결했다. 전대 전까지 대선 평가위원회와 혁신위원회 활동이 완료될 것”이라며 “이들 차기 지도부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준위와 중앙당선거관

위 구성 권한은 비대위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전대 준비를 위한 긴급사안 처리는 차기 당무위 개최 전까지 비대위에 위임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 일각에서는 ‘제보조작’ 파문에 따른 여파를 고려한 전대 연기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이날 당무위 참석자들은 논의 끝에 8월27일 전대 개최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현재까지 유력한 당권 후보로는 전정배(63) 전 대표와 정동영(64) 의원, 문병호(58) 전 최고위원 등이 꼽히고 있다. 황주홍(65) 의원, 이동섭(61) 의원, 박주원(59) 경기도당 위원장 등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이인주(45)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58) 의원, 김철근(49) 구로갑 지역위원장, 정호준(46) 비대위원 등도 안팎의 권유를 받고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秋 “박지원이 머리” vs朴 “이성 찾길”

추미에-박지원 ‘국민의당 제보조작’ 연일 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에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연일 정면충돌하고 있다.

추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DJ)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에게 행동하는 양심을 잊지 말기를 촉구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 대표는 이어 “지난 5월6일 박지원 전 대표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이의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들었습니다”며 “36초 동안 통화했다고 하지만 이는 최종 컨펌(확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주장.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의 ‘머리’가 박 전 대표 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지금, 사실을 왜곡하는 일은 집권 여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며, 추 대표의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쓰아붙였다. 그는 이어 “(추 대표가) 이번에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하라고 사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편향된 시각

을 가진 추 대표가 일찍 사법부를 떠난 것이 다행”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추 대표와 박 전 대표는 지난 탄핵 정국에서도 사사건건 충돌했으며 과거 민주당에서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특히, 박지원 전 대표 인맥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지난 총선 국민의당 후보로 추 대표 지역구에 출마한 것도 두 사람의 사이를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 대표가 연일 국민의당에 강공을 퍼붓고 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존재감 제고를 위한 의도적 도발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추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도 나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대표와의 대결 구도는 당내 친문 진영의 지지를 모으는 등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 대표의 행보가 협치의 공간을 흔들고 독선의 이미지를 강화, 오히려 그의 정치적 미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취업 특혜·제보 조작 동시 특검하자”

긴급의총서 결의안 채택 민심어반에 현실성 떨어져 당내 뽀족수 없어 ‘난감’

국민의당이 10일 특별검사를 임명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윤준용 ‘취업특혜 의혹’과 ‘제보 조작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리 자르기’, ‘대선 조작 게이트’ 발언 등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격에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맞대응 성격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뽀족수가 없는 탓에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취업특혜의혹-제보조작사건’ 동반 특검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증거 조작사건과 함께 그 사건의 원천인 문준용 씨 특혜제용 의혹 또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에 대표의 ‘국민의당 죽이기’ 음모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수사지침도 부족해 사실상(수사)결론까지 제시하며 검찰에 과잉충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은 ‘마법적 고의’라는 해괴한 논리로 권력의 요구에 맞장구를치고 있다. 과잉충성으로 신뢰를 상실한 현재의 정치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모두 진상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증거조작에 대한 국민의당의 진정어린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특검 언급을 자제했지만, 이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특검을 언급한다. 검찰의 수



결연 더불어민주당 추미에 대표가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착잡 10일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언론 보도 스크랩을 보고 있다. /연남뉴스

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적으로는 난감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언제까지 민주당 책임론만 주장하고 있을 수 없는데다 취업특혜의혹에 대한 특검 주장도 그다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받아줄 리 만무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함

께 특검 전선에 나서는 것도 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이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 여기에 민주당 추미에 대표 등 여권이 검찰을 압박,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호응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 등을 계기로 제보 조작 사건을 털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현재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사즉생의 각오를 해야 한다”며 “조작 부분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혁신과 민생을 화두로 새로운 출발에 나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